

완주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 상생발전 방안 107개 사업 발표

“젊은이에 희망을, 출향인들에겐 자부심을”

완주와 전주에 대한 통합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완주군 거주 순수 자발적 시민단체인 완주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 발전방안 12대 분야 107개 사업을 제안해 통합논의에 불을 당겼다.

완주 전주 상생 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주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대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박진상 완주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회장(호사당병원장), 이동진 완주 전주 상생 통합협회 이사장, 완주 전주 상생발전 김성연 대표, 완주 전주 상생발전 포럼 소인영 대표, 완주 전주 상생발전 연합회 윤여연 대표 등 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 6개 단체의 리더들이 참여하여 브리핑에 힘을 보탰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완주 전주 상생발전 방안 12개 분야 107개 사업을 제안하며 이번 기회에 완주와 전주가 통합돼 특례시로 지정되어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성도경 임시 공동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완주-전주 통합시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의 청사진, 통합시가 실행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했다.

성도경 임시 공동대표는 “전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필수”라고 주장하며,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73만명, 1년예산 3조3,000억원, 총면적 1,027km²에 이르는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면적 면에서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에 비해

2배나 더 큰 규모라며, 이에 따라 통합시는 전북자치도의 명실상부한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완주와 전주는 삼한시대부터 2천 년 넘게 이어진 공동체이며, 이러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통합시를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완주와 전주는 행정구역만 분리되어 있을 뿐 이미 생활권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엔 통합하게 된다면 다양한 강점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이 통합되면 행정서비스 또한 통합되고 광역행정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투자가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새만금-전주-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개발축의 중심에 완주와 전주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의 배후도시로서 통합시는 국가적 발전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완주의 산업과 전주의 인프라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모델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협의회는 완주와 전주 양 지역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 등 기존 통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주군 거주 순수 자발적 시민단체인 완주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주 전주 상생 발전방안 12대 분야 107개 사업을 제안했다.

“특례시로 지정돼 지역발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통합 축 자발적 시민단체 6개 참여 통합 의지 불태워

이를 토대로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12개 분야 107개의 완주 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이번에 도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주시에 “군민협의회가 제안하는 상생 발전방안을 민간 주도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완주 전주 상생발전 시민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양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이 주민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성 임시대표는 “김관영 지사가 7월 22일 발표한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특례시 지정으로 통합 이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공공시설 이

전, 관광단지과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 확충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급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비록 늦었지만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타향에 사는 출향 인사에게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며, 후손들에게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할 때이며,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중요로운 전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통합의 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

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완주군 반대 단체와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추진한 6,152명의 서명서를 6월 12일 완주군에 제출했으며, 완주군에서는 교부 받은 견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송부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4일 완주군민의 찬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견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명부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며, 범 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과 재정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 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대책위 측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전체 완주군민 9만9,000여명의 1/3 가까이 해당하는 반대하는 군민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7월 9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후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통합에 반대하며 오히려 완주시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앞으로 추진되는 완주 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투표는 내년 봄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도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특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전용태 의원, 부위원장에 염영선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용태 위원장(진안), 염영선 부위원장(정읍)을 비롯한 김술식(비례)·권요안(완주2)·오은미(순창)·나인권(김제1)·김성수(고창1)·박용근(장수)·박정규(임실)·임종명(남원2)·윤정훈(무주) 위원 11명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타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도 및 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태 위원장은 “초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한마음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상윤 의원 “전주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



더불어민주당 이상윤 의원(전주)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법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기관 중 1위로서, 2위 청주 90.54% → 3위 대전 90.18% → 광주 89.86% → 제주 88.78% 순으로 ‘최악의 영장발부율’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7월 31일 기준) 한 해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전주지법은 93.8%로, 1위 대전지법 94.4%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광주지법 88.1%, 청주지법 87.9%, 제주지법 80.0%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감안한 법원의 이 같은 빈번한 영장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서버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32건 자행한 검찰이 추가조작, 학력 위조 등 심각한 혐의가 있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구조차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어 “전주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 통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끝내 윤석열 검찰 정권과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통제를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김영명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검찰 ‘김건희 불기소’... 민주, 파상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파상공세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현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상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염영선 도의원, 축구 결의안 발의... “하루하루가 고통...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놓아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7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을 특검으로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과 함께 시작된 김건희의 의혹이 정권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영약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대선 조작이라는 범죄 의혹이 김건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



타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외쳤던 검사,

되고 있으나, 민생경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용산 대통령실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김건희를 지키는데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

문석열을 선출한 것이지, 의혹 종함세 트인 김건희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젊은는 오빠 뒤에 날뛰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현정 질서 유린을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다”며, “모든 의혹이 밝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잇따라 진행됐다.

먼저, 진형성 의원(전주2)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정책도 제시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금은 AI의 일상화가 곧바로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며, 앞으로의 공공행정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진형성 의원 서난이 의원 김명지 의원



강태창 의원 박정희 의원 김정기 의원

형태로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공행정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 하는 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2023.12.~2027.12.
남원시 흥정로 365 / 대표전화 063) 620-1114
인중 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심혈관, 응급, 분만, 투석 등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
- 지역사회 감염 대비 안전한 병원체계 구축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오전규 원장>

지역응급의료센터
24시간·365일 응급진료체계 구축
문의 063) 620-1119

건강증진센터
One-Stop 검진시스템 구축
문의 063) 620-1160

장례식장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문화
문의 063) 620-1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전문 의료인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문의 063) 620-1650